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평가

장 경 룡

광주여자대학교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II. 장기갈등의 남북관계	참고문헌
III. 정상회담 평가: 장기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정상회담 (summit meeting), 장기갈등 (long-term conflict), 남북한 관계 (inter-Korean relations), 구성주의 (constructivism)

국 문 요 약

남북관계를 장기갈등의 관계로 규정하는 이 글은 2007년 정상회담의 평가척도로 장기갈등의 7개 특성과 구성주의적 요소를 선정하였다: 국가이익에의 위협 감소 가능성, 국가 정체성에의 위협 감소 가능성, 부정적 인식의 감소 가능성, 의지의 제도화 감소 가능성, 화해의 반복적 실패 방지 가능성,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방지 가능성, 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의 증대 가능성, 그리고 구성주의적 해결 가능성 등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남한의 정체성 확보, 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의 증대, 그리고 구성주의적 해결 가능성 등이다. 평범한 의미를 부여받은 부분은 부정적 인식의 감소 가능성, 화해의 반복적 실패 방지 및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금지 부분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남한의 영토이익 위협 증대, 남북한 정체성 위협에의 감소, 의지의 제도화 감소이다.

I. 서 론

1972년의 <7·4 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의 <6·15 공동선언>에 이어, 지난 10월 4일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하, 10.4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남북 간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4번째 시도이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4시간에 걸친 구체적이고 진지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회담”이라고 평가하였다.¹⁾ 실제로, 동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1) 청와대. “합의 신속 이행...범정부적 조치 가동.” 2007. 10. 5

http://www.cwd.go.kr/cwd/kr/archive/popup_archive_print.php?meta_... (2007. 10. 7).

중요한 선언이다.

김연수 교수는 특히, 이번 회담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체가 남북한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정하였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대한 남북정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며, 남북한 공존상생의 경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대비를 위한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 요컨대 동 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계승을 넘어 한민족의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남북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

그런데 이와 같이 평가하는 전문가들조차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된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³⁾ 진행의 차질은 남북한 화해의 실패를 예고할 수 있다. 이 글은 남북간의 2007년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글이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남북한은 한국전 이후 장기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장기갈등의 남북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를 살핌으로써 10.4 공동선언을 평가해보는 시도이다.

문정인 교수는 1978-1988간 한국학자들의 남북한 갈등에 관한 연구를 성격, 기원, 형태, 그리고 관리의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총 1062의 연구물중, 556건 (52.4%)이 기원을, 219건 (26.2%)이 남북갈등의 형태와 과정을, 287건 (27%)이 갈등관리를, 그리고 오직 9건 (0.85%)만이 남북갈등의 성격을 다루었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문교수는 오직 28건 (2.64%)만이 체제의 차이, 이념의 상충, 그리고 분쟁에 대한 사회심리적 거리감 등을 다루었으며; 정책결정자들의 태도, 인식, 정향, 위협인식, 그리고 남북갈등의 총체적 갈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오직 26건 (2.45%)만이 남북간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연구하였으며; 그리고 남북갈등을 강도, 빈도, 그리고 장기성에 비추어 다룬 연구물 또한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⁴⁾

이 글은 남북갈등의 형태와 성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부분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연구가 장기성에 기반을 둔 연구가 거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가 매우 희소한 분야에 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은 먼저 남북관계가 장기갈등 관계임을 설명한다. II장은 장기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설명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그 완화에 기여할 것인가를 평가한다. 결론은 글의 요약과 종합평가 내용이다.

2) 김연수.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U-안보리뷰』, Vol. 21 (2007. 10. 15), 1-4.

3) *Ibid.*, p. 4.

4) Chang Keung R.,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A Protracted Conflict: Korea, 1948-1993*. (Unpub. Ph.D. Diss.) (Montreal, Canada: McGill University, 1996), p.62에서 재인용.

II. 장기갈등의 남북한관계

1. 장기갈등의 개념과 장기갈등의 남북한 관계

장기갈등은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국가정체성을 보호 그리고/혹은 확대하려는 동일한 상대들 간의 축적된 갈등으로 국제위기(전쟁 포함)와 화해실패 등의 빈번한 발생이 특징인 갈등이다.⁵⁾ 남북한 관계는 위에서 제시한 장기갈등의 개념적 기술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관계이다. 즉, 남북한은 1950년을 전후하여 한국전 (1950-1953); 1·21 사태 (1968); 미루나무 위기 (1976); 1차 핵 위기 (1993-4); 1차 서해교전 (1999); 2차 서해교전 (2002); 2차 핵 위기 (2002-현재) 등의 전쟁 및 국제위기 등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또한 7·4 공동선언 (1972) 이나 『남북기본합의서』 (1991-2) 등을 통하여 화해 및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1년 정도 지나자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위의 제시한 장기갈등개념은 (1) 장기갈등의 원인이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의 충돌 모두 임을; (2) 장기갈등에서 나타나는 국가들의 행태가 ‘화해의 실패’와 ‘국제위기(전쟁 포함)’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그리고 (3) 동 갈등이 축적된 갈등임을 밝힌다. 축적된 갈등은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나뉜다. 심리적 측면은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물리적 측면은 상대방을 향한 적대적 ‘의지의 제도화’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위의 장기갈등 특징을 완화 혹은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기여의 가능성이 높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가능성이 적다면 10.4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10.4 공동선언 평가의 기준이 될 장기갈등의 원인과 특징을 먼저 소개한다.

2. 장기갈등의 원인, 특징, 그리고 정상회담 평가의 기준들

(1) 국가이익

장기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허치와 러셋(Huth and Russett)은 대부분의 숙적(enduring rivalry)관계는 영토와 사람들에 대한 이익의 상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⁶⁾ 맥클리랜드(McClelland)는 베를린을 둘러싼 갈등이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처럼 오래 가는 갈등의 원인은 영토에 있다고 한다.⁷⁾ 고어쯔와 디-일 (Goertz and Diehl)은 영토야말로 자주 일어나는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떤 갈등이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쉽게 해결될 갈등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 중의 하나가 영토라고 주장한다.⁸⁾ 바스케즈(Vasquez)는 영토가 붙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쟁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⁹⁾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영토와 같은 국가이익에의 위협을 어떻게 그리고

5) Chang (1996), p. 26.

6) Paul Huth and Bruce Russett, "General Deterrence Between Enduring Riva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1 (March 1993), 61-72.

7) Charles A. McClelland, "The Beginning, Duration, and Abatement of International Crises," in Charles F. Hermann (ed.), *International Crises* (NY: Free Press, 1972), Ch. 5, p. 87.

8)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Territorial Chang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NY: Routledge, 1992), p. 14.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회담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이다.

(2) 국가 정체성

고질갈등이론(protracted conflict)가들은 장기갈등의 원인을 국가정체성에서 찾는다. 정체성은 일종의 집단 의식이며 인종 등과 같은 집단의 심리 내부에서 발달된다.¹⁰⁾ 정체성에의 위협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갈등은 매우 강도가 높아지거나 심각한 수준이 된다. 그와 같은 갈등에서는 화합이나 타협이 매우 힘들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고-따라서 양보하거나 양도할 있는 대상이 아님-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¹¹⁾ 국가정체성은 주로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역사와 공동의 목표에서 형성된다. 버턴(Burton)은 국제적 장기분쟁의 원인으로 국가이익을 지목하지 않고 국가정체성을 지목한다.¹²⁾ 국가정체성이 상충하거나 양립할 수 없을 경우 관련국들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때문에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장기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 평가의 두 번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 부정적 인식

장기갈등을 겪는 국가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상대방에 대한 이쪽의 행위 성격을-갈등적 혹은 협력적-기본적으로 결정한다.¹³⁾ 상대방의 예견되는 반응에 대한 평가도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인식 혹은 이미지에 근거를 둔다. 상대에 대한 왜곡된 혹은 부정적 이미지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시그널을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다.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왜곡된 이미지나 오해는 바로 전쟁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¹⁴⁾ 특히, 장기갈등 관계를 겪는 각각의 국가는 상대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때문에 상대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제안을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국가에 대한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도 바로 상대방의 사악한 성격이나 체제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갈등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남북한 양측 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회담 평가의 세 번째 기준이 된다.

(4) 의지의 제도화

상대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수록 정책결정자들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제도화된 의지'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노력은 강화된 적대적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장기갈등의 구도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9) John Vasquez, . *The War Puzz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23-152.

10)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NY: Penguin Books, 1991).

11)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NY: Harper, 1962), p. 312.

12) John W. Burton, *Global Conflict: The Domestic Sources of International Crises* (Brighton, Eng.: Wheatsheaf Books, 1984).

13)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14)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NY: St. Martin's Press, 1985).

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물리적인 준비를 급속히 강화시키는 의지의 제도화를 가져온다. 의지의 제도화가 부정적 인식과 결부될 경우, 고조된 갈등의 잦은 발생은 필연적이다. 어설픈 화해보다는 일선불사를 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7년의 선언은 남북한이 그동안 각각 마련하였던 제도화된 의지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가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네 번째 척도가 될 수 있다.

(5) 화해의 반복적 실패

이 글에서는 장기갈등의 특징으로 ‘화해의 실패’를 들었다. 화해의 실패는 화해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화해실패는 미시적으로는 화해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부족이나 부재 혹은 합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하락 등을 말한다. 거시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호의적 신호 무시, 화해요청에 대한 기각, 접촉이나 협상에의 참여 거부, 실질적 합의의 거부, 그리고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이다. 이번 선언의 경우, 무엇보다도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충실성과 가능성이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다섯째 평가요소가 된다.

(6)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이 글에서 말하는 국제위기는 양국 간의 폭력적 상호작용이 그 형태나 정도에 있어서 급증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그들 간의 관계를 뒤흔들면서 양자 간의 체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¹⁵⁾ 국제위기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부터 외교정책위기를 인식하는 국가가 무력적 행위를 고조시킬 경우, 최초의 상대방마저 그에 상응하는 무력적 시위를 고조시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장기갈등 구도 아래에서는 전쟁을 포함한 국제위기의 다발성이 특징이다. 혹자는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 위험은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장기갈등의 특성은 국제위기의 다발성과 전쟁으로의 비화가능성의 용이함이다. 남북 간의 국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이번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여섯째의 평가척도이다.

(7) 협력을 통한 공공이익의 증대

국제적 협력에 관한 이론은 장기갈등 국가들 간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다. 협력이론가들은 국가정체성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국가들의 이익추구라는 성향을 보인다. 그들의 주장은 무정부 상태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은 가능한데 이유는 바로 예측 가능한 공동이익¹⁷⁾과 지속적인 관계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⁸⁾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으로 하여금 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는가의 여부가 일곱 번째 평가요소이다.

15) Michael Brecher, *Crisis in World Politics* (Oxford: Pergamon Press, 1993), p. 3.

16) Muthiah Alagappa, .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 [미래대담 19], 미래전략연구원에서의 대담 (박철희 교수와), 2007. 10. 10 (<http://www.kifs.org/new/print.php?no=1968&mode=>).

17)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Books, Inc., 1984).

18) Robert Axelrod and Robert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226-254.

(8) 장기갈등 해소와 구성주의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이익, 정체성, 문화, 규칙과 규범, 아이디어 및 사회적 실체(social reality)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국제정치를 분석한다. 장기갈등의 종료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대표적 구성주의자 웬트는 국제구조를 물질적인 것으로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본다.¹⁹⁾ 국제정치의 내용은 국가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믿음과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한 믿음과 기대는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물질적 권력과 이익의 의미와 효과 역시 사회적 구조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웬트는 또한 무정부 상태도 국가들의 행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홉스적 문화가 상대방을 ‘친구’와 같은 존재로 보는 칸트적 무정부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남북관계가 홉스적 문화에서 칸트적 문화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질문이 동 선언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이 된다.

III. 정상회담 평가: 장기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1. 국가이익에의 위협 감소

국가이익에의 감소 문제는 결국 안보문제이다. 동 선언은 제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고 밝히고 있다.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아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남한의 영토문제에 중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 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이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공동변영을 추진하는 항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⁰⁾

NLL문제의 재설정을 왜 남한이 먼저 서두르는가? 몇몇 학자들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는 대목을 중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아왔듯이 북한이 그토록 이행을 기피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미 북한이 실질적으로 저버린 문서이다. 굳이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 문서에 남측이 근거를 두고 NLL문제를 먼저 재논의하자고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인가?

1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3장.

20) 남성욱. “정상회담 평가: A학점과 B.C학점 사이에서”

(<http://www.kifs.org/new/print.php?no=1966&mode=> (2007. 10. 12)

NLL은 한반도의 화약고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NLL을 안정시키고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2004년 6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신호 체계 확립에 합의하였음을 강조한다. 그 결과 참여정부 4년 반 동안 단 한차례의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²¹⁾ 그것이 과연 북한의 변화 때문이고 제도적 장치 때문인가?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은 남한에게 영토에의 위협을 한층 높인 정상회담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회담이다.

2. 국가 정체성에의 위협 감소

선언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기 때문에 내부문제에 서로 간섭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8항은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혀 남과 북의 개별적 정체성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데로 정체성을 강조하는 듯하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 문제는 이미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불거진 문제이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은 남한의 반공주의가 민족의 일체성을 방해하고 따라서 민족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논리로 북한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남한에 요구하였다.²²⁾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은 ‘민족의 일체성’이라는 용어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자는 열망을 표현하는 정치적 수사학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²³⁾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극명하게 다른 해석은 결국 7.4 공동성명의 사문화 곧 남북한 화해의 실패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10.4 선언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남겨두었다고 본다.

한편, 이번 10.4선언에는 남한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항이 있다. 남한으로 하여금 남북문제의 중요한 역할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인정한 사항이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북미 간 평화협정을 우선시하고 남한의 역할이나 입장은 무시하여 왔다. 통미봉남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선언은 ‘남과 북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오히려 남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²⁴⁾ 이와 같은 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자로서의 남한의 정체성이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당사자 지위가 분명하게 인정된 점은 향후 이전에는 북미대화 초점이 맞추어졌던 상황이 앞으로는 남북대화과 북미대화의 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²⁵⁾ 요컨대,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화해의 실패를 가

21) 이종석. “남북간 ”평화변영의 공동선 부정할 순 없다,

“<http://www.unikorea.go.kr/kr/CMSF/CMFSBsub.jsp?topmenu=4&menu...> (2007.10.8).

22) 『로동신문』. 1972. 7. 11.

23) 『동아일보』. 1972. 7. 4.

24) 이경주. “1004공동선언과 평화체제의 남북 당사자주의,” 『평화논평』, 제24호 (2007. 10. 15)에서 재인용.

25) 정성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새로운 미래,” 제9차 서울평화통일포럼 세미나 발제문 (2007. 10. 8), p.5.

저울 수 있는 남북한 정체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한반도 문제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행위자라는 남한의 정체성을 북한이 부여한 사항은 매우 큰 성과이다.

3. 부정적 인식의 감소

동 선언의 제2항은 남과 북이 그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상호 간 상대방의 내부문제에는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다. 또한,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단순히 신뢰관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선언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는 과거의 분쟁에 대한 정리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제도화된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 선언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처럼 과거로부터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북핵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남한 국민의 대북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자신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자신들의 제도화된 의지를 언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 문제는 차치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문제를 남북정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대북인식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은 이미 논외로 한 듯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특히 남한의 대북인식 전환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4. 의지의 제도화 감소

동 선언은 2항 2조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남북 양측의 의지의 제도화 감소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도 밝힌다.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국방장관 회의가 북한의 불참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한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의지의 제도화 감소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이다. 동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간단한 선언이다. 그야말로 가장 중대한 문제는 6자회담으로 넘겨버렸다. 남성욱 교수의 말대로 평소 입만 열면 무조건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더니 북핵폐기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²⁶⁾ 의지의 제도화 감소에 남북정상회담은 크게 공헌하지 못하였다.

5. 화해의 반복적 실패 방지

남북한 관계에서 화해가 실패한 경우가 크게 두 번 있었다. 첫째는 7.4 공동성명의 실패이다. 둘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패이다. 7.4공동성명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이다. 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적 일체성)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자주적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남한은 주한 미군이나 유엔사는 외세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는 통일에 대한 방법론이 남북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한은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였고, 북한은 분단된 한반도 문제는 일거에 모두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은 7.4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다.

7.4공동성명 준비시의 큰 문제점은 남북간의 차이를 양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그 차이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 하였다는 점이다. 즉, 양측은 합의와 화해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처리하였다. 양측은 그저 민족정신에 입각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였다. 1972년 5월 4일, 김일성은 양측이 가슴을 열고 대화하면 통일의 3대원칙을 이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한의 이후락은 7.4공동성명의 이행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만약 남북한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한 차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같은 민족끼리라도 필요한 협상은 분명하고도 실질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남북 정상간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관련하여 11월 중 첫 총리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양측간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혹은, 양측간의 합의와 화해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다. 선언문 1항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로 되어 있다.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7.4공동성명에서 문제되었던 ‘자주’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 있는 듯하다.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에의 의지도 불명확하다. 노태우 정권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남한과 달리 북한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논의를 기피하여왔다.²⁸⁾ 이번 정상회담은 문구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합의의 결렬방지 방안이나

26) 남성욱 (2007).

27) Chang (1996), p. 224.

28) 이종석 (2007)

북한의 일방적인 화해 과기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화해의 실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실천성이 정상회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6.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방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갈등의 관계에서는 국제위기가 전면적으로 비화하기 쉽다. 물론, 현재 남북관계의 진행사항으로 보아 남북 간의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의 제1차 서해교전과 2002년의 제2차 서해교전의 발생으로 보아 무조건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기대할 일은 아니다.

남북한은 선언문 제3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고 또한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고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하고 때로는 쉽게 합의사항을 파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났던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편, 국제위기는 외교정책위기에서 발생한다. 국제위기가 관련국들 간의 상호작용이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양국 간의 국제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면, 외교정책위기는 관련국들의 최고정책결정자들이 자국의 최고 중요가치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외교정책위기 인식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마련하였는가?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우선, 양자 간에 자신과 상대방의 최고 중요가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양측은 선언문 3항에서 양측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합의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음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양측의 최고 중요가치 (예: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음은 분명하다.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될 때 양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물론 현 정부는 지난 서해교전 등을 통해 양측 간에 신호체계를 마련하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서해교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²⁹⁾ 그렇다면 2002년부터 진행된 제2차 북 핵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남북 간에는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이 있었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위기 고조시에 남북한이 상호협력하여 위기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분쟁해결과 관련한 선언적 사항들이다.

7. 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의 증대

29) 앞의 글.

선언문은 1항 1조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한다고 명시하였다. 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하여 남북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남과 북은 또한 3항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라는 공동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것을 합의하였다.

더욱, 긍정적인 부분은 5항이다. 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여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또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아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양측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고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의 증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위의 구상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서해구상과 관련하여 북방한계선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임기가 남지 않은 정부가 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⁰⁾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측면이 크게 부각되면서 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부담 문제³¹⁾는 차기 정부의 의지 문제이므로 실현의 불확실성이 문제된다.³²⁾ 요컨대, 정상회담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남북경제협력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성이 문제가 된다.

8. 구성주의적 해결

웬트는 홉스적 무정부가 칸트적 무정부로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친구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이다. 칸트적 무정부 상대가 되면 양측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이 위와 같은 칸트적 무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3항에서 남과 북은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어떤

30) 정형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구상,” KIFS-1 (2007. 10. 11).

31) 퍼주기 논란과 관련하여는 김연철 (2007) 참고.

32) 정형곤 (2007), 앞의 글.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힌다.

위와 같은 칸트적 무정부로의 변화는 국제구조와 단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과연 남북한은 양측 간의 국제구조 변화를 생각하였는가? 생각하였다. 양측은 2항에서 양측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4항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다.

장기갈등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종료되려면 믿음과 기대가 중요하고, 이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남북은 6항에서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남북 간의 믿음과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국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위의 변화는 논의되었는가?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남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양측 간의 실재하는-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고 밝혔다. 굳이 찾는다면, 남북관계 (국제구조)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는 부분 정도이다. 만약 이와 같이 남북한이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는다면 결국 남북한 관계 혹은 남북한 간의 국제체계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단위와 국제구조는 상호 연관되기 때문이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 국제구조의 변화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단위의 변화 노력에 미흡하여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장기갈등을 경험하는 국가들은 환경의 변화-내부적 혹은 외부적-가 생길 경우, 그와 같은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만약 화해를 통하여 국가이익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그와 같은 환경변화를 기회로 인식하여 화해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화해의 가능성이 곧 실질적인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2007년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남북 화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글이다.

남북관계를 장기갈등의 관계로 규정하는 이 글은 2007년 정상회담의 평가척도로 장기갈등의 7개 특성과 구성주의적 요소를 선정하였다: 국가이익에의 위협 감소 가능성, 국가 정체성에의 위협 감소 가능성, 부정적 인식의 감소 가능성, 의지의 제도화 감소 가능성, 화해의 반복적 실패 방지 가능성,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방지 가능성, 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의 증대 가능성, 그리고 구성주의적 해결 가능성 등이다.

국가이익에의 위협 감소 가능성은 큰 공헌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NLL 문제 등으로 인해

남한의 영토 위협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정체성에의 위협 감소 가능성 부분에 대하여 남북한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을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주요 행위자로 북한이 인정한 사항은 큰 성과이다. 부정적 인식의 감소 가능성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는 듯하다. 정상회담은 남북한 특히 북한의 의지의 제도화 감소 가능성에 큰 공헌을 하지는 못하였다. 화해의 반복적 실패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방지 가능성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협력으로 인한 공동이익의 증대 가능성 부분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높게 평가 받을만한 부분이다. 다만, 실현성의 문제는 남아 있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남북한 단위의 변화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연수.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U-안보리뷰』, Vol. 21 (2007. 10. 15), 1-4.
- 김연철.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KNSI 특별기획 제19-1호 (2007).
- 남성욱. “정상회담 평가: A학점과 B.C학점 사이에서,”
<http://www.kifs.org/new/print.php?no=1966&mode=> (2007. 10. 12)
- 이경주. “1004공동선언과 평화체제의 남북 당사자주의,” 『평화논평』, 제24호 (2007. 10. 15).
- 이종석. “남북간 ”평화·번영의 공동선 부정할 순 없다.“
<http://www.unikorea.go.kr/kr/CMSF/CMFSBsub.jsp?topmenu=4&menu...> (2007.10.8)
- 정성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새로운 미래,” 제9차 서울평화통일포럼 세미나 발제문 (2007. 10. 8).
- 정형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구상,” KIFS-1 (2007. 10. 11).
- 청와대. “합의 신속 이행...법정부적 조치 가동,” 2007. 10. 5
http://www.cwd.go.kr/cwd/kr/archive/popup_archive_print.php?meta_... (2007. 10. 7)
- Alagappa, Muthiah.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 [미래대담 19], 미래전략연구원에서의 대담 (박철휘 교수와), 2007. 10. 10
<http://www.kifs.org/new/print.php?no=1968&mode=>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Books, Inc., 1984.
- , and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eohane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226-254.
- Boulding, Kenneth E. *Conflict and Defense*. NY: Harper, 1962.
- Brecher, Michael. *A Study of Crisis*, Vol. 1.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 , *Crisis in World Politics*. Oxford: Pergamon Press, 1993.

- Burton, John W. *Global Conflict: The Domestic Sources of International Crises*. Brighton, Eng.: Wheatsheaf Books, 1984.
- Chang, Keung Ryong.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A Protracted Conflict: Korea, 1948-1993*. (Unpub. Ph.D. Diss.), Montreal, Canada: McGill University, 1996.
- Goertz, Gary, and Paul F. Diehl. *Territorial Chang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NY: Routledge, 1992.
- Huth, Paul and Bruce Russett. "General Deterrence Between Enduring Riva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1 (March 1993), 61-72.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McClelland, Charles A. "The Beginning, Duration, and Abatement of International Crises," in Charles F. Hermann (ed.), *International Crises*. NY: Free Press, 1972, Ch. 5.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NY: Penguin Books, 1991.
- Stoessinger, John G. *Why Nations go to War*. NY: St. Martin's Press, 1985.
- Vasquez, John. *The War Puzz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동아일보』 . 1972. 7. 4.

『로동신문』 . 1972. 7. 11.

Abstract

Assessing the 2007 Summit Meeting

Chang, Keung Ryong*

This study evaluates 2007 two Korea's Summit Meeting. The evaluation is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long term conflict theory. To what extent, can the Summit Meeting decreas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long term conflict?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 long term conflict are threats to national interest, threats to national identity, negative perception of the other, (negative) institutionalized commitments, repeated accommodation failure, and repeated occurrence of international crises. In addition, common interests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as well as constructivist approach toward conflict resolution are also regarded as evaluation criteria.

Positive evaluation results were given to the criteria regarding South Korean national identity, common interests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tructivist approach toward conflict resolution. Evaluations on the possibility of decrease in negative perception, repeated accommodation failure, repeated international crises were of average results. Increased threat perception of South Korea's NLL, no concrete negotiation on both Korea's national identities, and no concrete measures to decrease two Korea's institutionalized commitments led to negative evaluation results.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24일,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